

‘AI 로봇 자율주행차’ 내년부터 광주도심 전역 누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단독 최종 선정
국비 622억 확보…200대 이상 투입
복잡한 도심 돌발변수 학습 필수적
‘미래차 소부장 산업’ 시너지 기대

2026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로봇 자율주행차’ 200여 대가 광주시내 곳곳을 누비게 된다.

광주시가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로 단독 선정되면서 도시 전체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거대한 실험장(Living Lab)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자율주행 산업육성’ 신규 사업 명목으로 국비 622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국토부 전국 5개 중소 규모 도시에 자율주행 도시를 선정하려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수정, 광주를 최종 낙점했다. 선정 배경은 단순히 외곽도로를 장거리 주행하는 것보다 깊은 구간이라도 복잡한 도심에서 다양한 돌발 변수를 학습하는 것이 기술과 도화에 필수적이라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광주가 최적지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구현이다. 그 선봉에 ‘AI 로봇 자율주행차’가 선다.

정부는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 이상을 투입해 기존의 제한된 시범지구 노선을 넘어 도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주행하며 데이터를 쌓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광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진곡산단과 빛그린산단, 미래차산단을 잇는 3개 벨트를 완성하고 이를 도심 전역으로 확장해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도 마련됐다. 대기업이 자율주행 차량 제작과 관계 플랫폼 구축을 맡고, 유망 스타트업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가동된다.

여기서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는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AI 데이터센터로 모인다. 시는 오는 2029년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AI 학습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데이터를 가공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에는 학습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7억2000만원도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업들의 밸류를 잡던 규제 벽장도 대폭 풀린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하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지방 도시 하나를 통째로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구상이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가 최근 시가 발표한 ‘미래차 소부장(소자·부품·장비) 산업육성 마스터플랜’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실증을 넘어 관련 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공항은 1964년부터 군공항과 통합운영돼 왔으나 주민들의 소음·재산권 침해 피해가 있따라 이전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공항 활주로와 청사 전경.

/남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정부 ‘재정 보증’이 최대 관문

시 ‘기부 대 양여’ 방식 막대한 이자비용 발생…공자기금 지원 요청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재정문제’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해소할 안전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첫 회의가 ‘원샷 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지역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6자 TF 회의가 이달 중순께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 주도로 당시자간 논의된 재안을 확정 짓는 실질적인 담판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 논의는 ‘9부 능선’을 넘은 상

태다.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원칙과 무안발전을 위한 ‘1조원 규모 지원책 마련’(정부 3000억, 광주시 1500억, 기부 대 양여 차익금 5500억 추산), 무안군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사업 방식, 즉 재원 조달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다.

광주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자체가 빚을 내 공항을 짓고 나중에 땅을 팔아 갚는 이 방식은 사업 기간이 최소 8년 이상이어서 수조 원대의 이자 부담을 광주시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을 승부 수로 던졌다.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무안군을 지원하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정부가 ‘재정 보증’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준다면, 굳이 2차, 3차 회의를 열 필요 없이 이번 광주 회의에서 최종 합의문 작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협의는 끝났다.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만 남았다”며 “정부가 전한적인 자세로 광주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리는 첫 회의가 곧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흥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구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커던 사안에 있어서도 광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다. 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신임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오플록 기자 kroh@

광주 반도체 인재 키운다

▶ 1면에서 계속

2020년 개교한 ‘광주 AI관 학교’는 내년 7기부터 단순 코딩을 넘어 AI 전문가 멘토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AI-SW 마이스토로 과정’을 신설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63억원이 증액된 총 105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미래 핵심 인재를 조기 발굴할 ‘AI 영재고등학교

교’ 설립 작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로 31억49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실시설계와 교육과정 개발, 우수 교원 확보 등 실질적인 개교 준비에 착수한다. 이로써 광주는 고교 단계의 영재고부터 대학의 특성화 학과, 실무 중심의 사관학교, 최고급 과정인 Arm스쿨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적 기업인 Arm의 교육기관 설립 추진은 광주시가 인공지능을 넘어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국 평균 순자산 5% 늘 때 광주·전남 1%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 등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 4억7144만원

광주 3억5천만·전남 3억1천만원

기구당 평균 순자산이 전국적으로 5% 늘 때 광주와 전남은 각 1% 오르는 데 그쳐 지역 격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기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2250만원) 늘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광주 기구당 순자산은 지난해보다 1.0%(356만원) 늘어난 3억5657만원이었고, 전남은 1.7%(525만원) 증가한 3억164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기구당 순자산은 전국 평균을 밀드 있다.

광주·전남 순자산 증가 폭이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실물자산 중심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뒤쳐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기구당 평균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전년보다 5.8%(2344만원) 늘었다.

광주는 2.9%(876만원) 증가한 3억1385만원에 그쳤고, 전남은 1.7%(442만원) 줄어든 2억6117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실물자산이 증가했지만 올해 오름세가 꺾였다.

김시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소득과 자산이 고고루 배분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광주는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데 수요가 부진한 측면이 있어 실물자산의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기구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소비의 차이도 생기게 된다”며 “소비가 위축되면 전반적인 경기와 지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영암나루태양광 1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시흥면 한방리 1801
• 30필(4000평)
• 발전소 면적: 154,370.8m²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26,000㎾
• 사업시작일정: 2028년 1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11.01~2048.10.31(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식회사 영암나루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5.12.02~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1-8012 - 팩스: 02-551-7777
- E-Mail: srkim@solenergy.co.kr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영암나루태양광 2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시흥면 한방리 1684
• 41필(4000평)
• 발전소 면적: 202,222.3m²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34,000㎾
• 사업시작일정: 2028년 1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11.01~2048.10.31(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식회사 영암나루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5.12.02~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1-8012 - 팩스: 02-551-7777

- E-Mail: srkim@solenergy.co.kr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사업시작일정: 2028년 12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12.01~2048.12.31(20년)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민의견은 2028년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